

법무부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1. 16.(금) 경향신문 “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”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, 피해 계절근로자들의 재입국 요청 민원에 대해 법무부가 임금체불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하나,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법무부 답변 내용 관련

- 법무부의 민원 답변 취지는 임금체불 당사자인 고용주의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, 임금체불 피해 계절근로자도 제도상 재입국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.
-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는 지방정부가 발급하고 있으며, 기존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법무부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 노력

-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‘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’ ‘근로감독관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·상담 지원체계 구축’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, 부적합 숙소 제공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(관계부처합동 ‘26.1~3월)
- 아울러,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·투명성 확보 및 입국 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‘계절근로 전문기관’을 지정·운영할 예정입니다.

□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인권침해 없는 체류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병철 02-2110-4217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석 02-2110-4087

